2공항 여론조사 언론사 등 제3기관 가닥

제주도-의회 '안심번호' 문제로 합의문 효력 기간 연장
언론사 등 실시하는 선거여론조사에 찬반 문항 포함 실시

11일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왼쪽)과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 조정·합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찬반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가 언론사나 제3기관이 실시하는 선거여론조사에 포함돼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11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 조정·합의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조정·변경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앞서 도와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합의문에서 여론조사 완료 기한을 당초 1월 11일(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10일 이내 연장)로 잡았지만 추진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부여받지 못하는 문제에 부딪혔고,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면서 '여론조사 기간은 세부 조사방안에 대해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연장 조정됐다.

여론조사 주체도 '안심번호'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언론사 등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제3기관으로 변경 추진된다.

이날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형식은 선거여론조사에 포함되는 방식이 되는 것"이라면서 "주최는 도나 의회가 아닌 언론사 등 기관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협의해야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에도 불가피하게 연장된 사유를 알리고 의견을 들을 것"이라면서 "추후 세부적인 조사방안은 의회와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명환 의원도 향후 여론조사를 실시할 언론사 등 제3의 기관 선정 문제 등에 대해 도와 의회가 신중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협의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최소 6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론조사 비용문제를 비롯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론조사 주관 기관 선정도 문제지만 여론조사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조사 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수용성 문제가 남아있다.

이상헌 단장은 "(국토부가) 적어도 지금 (변경된) 방식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수긍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향후 조사여건·방안 변경 등을 국토부에 전달해 의견을 확인할 예정임을 밝혔다.

홍명환 의원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 국토부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제주남단 하늘길 안전 우려 해소한다

한·중·일 제주남단 항공회랑에 새 항공로·항공관제체계 구축

한·중·일 3국이 제주남단의 하늘길 안전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항공로 구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1983년부터 운영돼 온 제주남단의 항공회랑을 대신할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체계를 오는 3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하기로 3국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2019년 1월부터 한·중·일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해 협의한 끝에 결정됐다.

당초 지난해 4월부터 새 항공로체계로 전환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후속 협의와 시행이 지연됐고, 지난해 5월부터 한·중·일 간 지속적 서면협의와 화상회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았다.

이번 합의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항공안전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7년간 불완전한 운영 체계로 인해 국제항공사회의 장기 미제 현안으로 남아있던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설정 당시에 비해 교통량이 매우 증가해 ICAO 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안전우려가 높았다.

실제 1983년 설정 당시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하루 평균 항공 교통량은 10대였으나 2019년에는 하루 평균 580대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항공 회랑을 거두고 새로운 항공로와 관제운영체계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제주남쪽 비행정보구역의 항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효율적인 항공교통망으로 교통 수용량도 증대하는 등 국제항공운송을 더 잘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1994년 한·중 항공협정 체결 이후 서울-상해 정기노선 항공편이 수십년간 비정상적으로 다니던 것을 이제부터는 국제규정에 맞게 설치된 정규 항공로를 이용해 정상적인 항공관제서비스를 받으며 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드라이브스루 마냥 편리하기만 할까요?"

권익위 18일까지 의견 수렴
불편사항·혼잡 책임주체 등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8일까지 드라이브스루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은 제주시 일도2동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모습. 사진=한라일보 DB

"사거리에서 녹색 신호가 켜지면 직진 차량과 드라이브스루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뒤엉켜서 직진하려는 차는 불과 몇 미터도 이동하지 못해요."

매년 드라이브스루 매장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드라이브스루로 인해 겪는 불편을 살펴보고 해소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국민의견 조사의 주요 내용은 ▷드라이브스루 증가에 따른 불편 사항 ▷드라이브스루 주변 교통 혼잡의 책임 주체 ▷드라이브스루 입지 제한의 필요성 ▷우선적 도입이 필요한 정책 순위 등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2015년 1월~지난해 7월) 민원정보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드라이브스루 관련 민원은 총 1121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내용은 승차 구매점 이용에 따르는 교통법규 위반, 불법 주정차, 교통 정체, 보행자 안전시설 미흡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 및 불만이 매년 증가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승차 구매점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견과 민원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승차 구매점의 편리함에 가려진 불편함을 들여다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학생인권조례 후속 작업 '속도'
이석문 교육감 교육단체 순방

제주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앞두고 12일부터 15일까지 도내 교원단체 및 학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학생인권조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이석문 교육감이 12일 제주학생인권조례TF와 제주 고교 학생회장단 연합 '맨도롱', 13일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및 제주교사노동조합을 연이어 만나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아울러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인권교육센터'의 밑그림도 완성되고 있다.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 설치될 인권교육센터에는 타 시·도 운영 사례에 비춰 팀장급 1명을 포함한 총 5명이 근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설치는 늦어도 3월 중으로는 이뤄질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형 스마트시티' 조성 날개 달까

국토부 2월 중 본사업지 선정
선정되면 2년간 200억원 투입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에 선정될 경우 향후 2년간 국비 등 총 200억원 투입으로 '제주형 스마트시티'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선정된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 지역에 대해 2월중 경쟁을 거쳐 본사업 지역 3곳을 결정하고, 각 사업들의 성과를 본격화해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예비사업에는 제주를 비롯 강릉, 김해, 부산 등 4곳이 선정됐는데, 이번 본사업 성과 평가에는 지난해 본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창원, 수원, 광주 지역도 포함돼 7곳이 경쟁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대학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서비스를 상품화하고 이를 확산해 신사업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2020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14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솔루션 실증에 나섰다.

기존 주유소, 편의점, 버스정류소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스마트 허브로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와 e-모빌리티 공유 솔루션을 연계해 'e-삼다(3DA)' 미래(생활)도시 사업 구현에 주력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오픈 통합플랫폼 'e-3DA.com'과 모빌리티 운영 어플인 'GreeGo'를 공식 론칭했다.

도관계자는 "스마트시티 본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최대한 준비하고 있다"면서 "올해 신규로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 공모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골고루 보급해 국민들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 솔루션 확산사업'을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22곳 내외로 확대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濟州鄕校 儒林 여러분! 제주향교에서 진행하는 '전교 재선거'의 부당성을 알립니다.

제주향교 제33대 전교 선거와 관련하여

제주향교 정관 및 규정에 의거 2020년 11월14일 전교 선거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호1번(J후보)을 당선시켜 2020년12월15일 비대면 유림임시총회에 보고하고 당선증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전교(B전교)는 기호1번(J후보)당선인이 후보등록 구비서류제출 미비와 선관위가 불법을 자행해 기호1번(J후보)을 당선시켰다고 하면서 재차 전교 재선거를 실시하겠다고 2021.1.8. 신문 지상을 통하여 공고문을 게재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3대 전교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은 재선거는 효력도 없거니와 전교가 임의대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임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전교 선거 과정 -

1. 2020.11.26일 및 2020.11.27일 선관위에서는 2명의 후보(J후보·K후보)가 서로 '공명선거 이행각서'를 작성 하고, 공탁금 납부한 것을 확인하여, 2020년 11월 27일 선관위 회의에서 기호추첨을 진행해 두 후보(J후보기호1번, K후보 기호 2번)는 이미 경선으로 진행 된 상태가 되었음.
2. 2020.11.30. 선관위 회의 시 전교후보자 입후보 서류에 대한 심사는 전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전교(B전교)가 또 2번 후보 (K후보)에 대해서 범죄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데도 그 제출을 인정하면서 1번 후보(J후보)에 대해서 범죄사실증명서를 미제출했으니 등록을 무효화 시켜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여 회의가 정지됨. 이에 선관위 위원들은 '범죄사실 증명서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어떠한 경우든 제출할 수 없으며 또 미 제출사유서를 제출했고 경찰서 담당자와의 미제출내용 대화녹취록을 청취확인하여 1번 후보의 등록에 이상이 없으니 등록 시키자고 하자 이를 무시하면서 전교(B전교)는 다시 향교 정관에 그 서류의 제출 규정이 있으니 악법도 법이다고 하면서, 어쨌든 1번 후보(J후보)는 미제출했다고 주장함. 11월29일에는 전교가 전교추대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후보자 심사의 권한도 없으면서 후보등록을 무효 선언하여 추대위원회의가 파행이 되면서 산회됨.
3. 2020.12.3 선관위회의
   2번 후보(K후보)에 대해선 선거관리 규정에 의한 부정선거 고발장이 접수되어 선관위 회의로 '후보등록 무효'가 가결됨. 당시 선관위장이 선거사무장에게 선관위 직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직인을 보관한 책상서류함을 몰래 숨겨서 사용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선거사무장이 스스로 사임하고, 위원장이 새로 바뀌면서 직인과 선거관련 서류 일체를 신임 선관위 위원장에게 인계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인계를 거부해, 선관위에서는 과반수의 의결로 기존 직인은 폐기하고 새 직인을 각인하여 사용하기로 정함.

-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

1.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는 "범죄사실증명서"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어떠한 경우든 제출하지 못하며 이에 대한 미제출 사유를 밝힌 점과 경찰서 담당자와의 제출불가 녹취록을 청취 확인했으니, 2020년12월8일 8차 회의 시 선관위에서 후보등록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후보등록을 의결한 것임.
2. 전교(B전교)와 향교사무국장(선거사무장 겸임 K모)이 선거관련 서류와 직인을 선관위가 아닌 향교서류라고 주장하며 인계해 주지 않자, 법조계의 자문을 구하고 선관위 위원들이 과반수 동의 하에 기존 직인을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새로 직인을 각인하여 사용키로 가결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B전교)는 선거관리위원들이 작당(作黨)하여 가짜 직인을 만들어 불법으로 전교를 당선시켰다고 전교 선거의 무효 및 당선무효를 주장하면서 제주향교 유림들에게 문자 및 문서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있음.
3. 선거관리위원들이 불법으로 전교(기호1번,J후보)를 당선시켰다고 주장하며, 현전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으로 선거관리위원 6명과 제33대 전교 당선인을 향교 및 유림관리 시설에 대한 출입금지 (영구, 8년, 6년, 5년 등)를 절차를 무시해 징계를 진행함.
4. 전교(B전교)는 근거규정 없이 선관위를 임의로 해산시키고, 적법하게 진행하던 선관위의 선거업무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전교(B전교)임의로 효력이 없는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하고, 전교 재선거 실시를 공고하여 제주유림사회에 대해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음.
5. 위 불법과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은 분명히 전교(B전교)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바라건대 지금이라도 전교로서의 본분을 되찾고 선비의 화해정신으로 중용을 지켜 정도의 길을 걸어 가주시길 우리 유림들은 기대합니다.

濟州鄕校 第33代 典校選擧管理委員會